

## 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 요소 고찰: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중심으로

김희승\*

이 글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중심으로 시민운동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고찰하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와 작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처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1990년대 중반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자는 선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금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운동이 시민 참여 없는 시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대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듯 행세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본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선의의 의미는 사라진 채 시민운동 비판의 상투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변화는 권력에 봉사한다는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로 변화되는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 형성이 필요했던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언어가 전제와 거짓인과를 거쳐 시민운동비판의 상투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부비판의 언어에서 지배권력의 언어로 변화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언론과 시민단체간의 헤게모니 갈등이었다. 언론으로 대표되는 기

---

\* 전남대 NGO협동과정 박사과정.

존권력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시민단체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할 수 있다. 내부비판의 언어가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로 변모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 담화는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끊임없이 침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권력에 봉사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봉사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언어를 다시 시민운동 내부 비판의 언어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 Ⅰ 주제어 Ⅰ

시민운동, NGO, 언론, 이데올로기, 시민없는 시민운동

## I. 서론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과 논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는 시민운동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시민운동진영 내부의 흐름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새로운 시민단체의 출범이다. 전자는 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의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시민운동진영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 그리고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 필요성 등 최근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질적 도약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현재의 시민운동을 압축성장한 시민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민운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충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내포되어 있으며 소통과 대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운동의 과잉과 권력화를 비판하며 차제에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후자의 입장은 현재 한국 시민운동을 과잉된 시민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권력화, 정치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민없는 시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대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듯 행세하고 있으며, 시민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이슈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과잉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sup>1)</sup>. 따라서 이러한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무책임과 정치화된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새로운 시민운동 단체들을 출범시키고 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주장은 과연 타당한 비판인가? 일부 언론과 지식인이 제기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주장은 새로운 시민운동 비판은 아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적 합법성' 등 한국의 시민운동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시민운동 비판 담론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은 다른 종류의 시민운동 비판들과는 달리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침식할 수 있는 부정적 비판으로 시민단체들에게는 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Government)와는 다르게 시민단체의 활동은 늘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정부와는 달리 NGO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 하곤 했다. 이러한 내용적 정당성은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의 지지나 참여

1) “다른 것 그런대로 다 이해하려고하지만 환경단체가 무슨 국보법폐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지금의 시민운동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환경단체에 가입한 시민이 회비를 내는 것은 환경을 지키라는 것이지 언제 국보법폐지라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활동을 하라고 회비를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2005년 5월 NGO학회 포럼에서 뉴라이트운동단체 사무처장의 발언)

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시민참여 없는 시민운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민참여의 문제가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의 문제에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결국 시민단체의 이러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부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처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자기비판”하면서 시민운동진영 내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다(하승수, 2003). 이 말의 기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창립 3주년을 맞아 연세대 장원기념관에서 개최한 내부토론회에서 당시 700명에 불과한 회원규모를 치칭하면서 사용했다는 설(박원순, 2002: 81)과 1994년 경실련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경실련 일부인사들의 기성정치권 편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나왔다(시민의 신문, 2002.1.11)는 설이 있다. 두 가지 기원 중 어느 것이 맞더라도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1990년대 중반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자는 선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이제 시민운동에 비판적인 언론과 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되면서, 처음 사용 의도와는 달리 시민운동을 부당하게 폄하하는 말로 전이되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진짜 시민없는 시민운동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낙인 앞에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시민운동 진영의 반박들은 무기력하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애초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선의의 의미는 사라진 채 현재는 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권력에 봉사한다는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과정과 의미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 형성이 필요했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중심으로 시민운동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와 작용에 대해 파악한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한다. 이론 고찰과 실증 분석을 병행 통합함으로써 시민사회비판의 이데올로기 요소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올리비에 루블이 제시한 언어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단상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형성과 기능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운동 비판의 내용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추적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고찰한다.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분석은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인 KINDS(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www.kinds.or.kr](http://www.kinds.or.kr))를 이용한다. 분석 시기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1994년부터 2005년까지로 한정하고, 분석 주제어는 “시민운동”과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 1.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789년 앙트완 네스튜트 드 트라시(Antoine Destutt de Tracy)<sup>2)</sup>가 처음 이데

---

2) 프랑스의 철학자(1754-1836). 프랑스 혁명 이후 집정 정부하에서 공교육위원회 위원

올로기라는 신조어를 사용한 이래 이데올로기는 사회과학 전 영역에서 가장 난해한 개념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관념들의 근거와 타당성에 관해 묻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개념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며 그 정확한 규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뒤따른다(데이비드 맥켈런, 구승희 옮김, 2002: 15).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이데올로기 개념은 거의 전적으로 맑스의 저작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맑스에게 이데올로기는 은폐하고 숨기는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즉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표층관계에서 이탈해 기본적인 생산관계를 은폐하는데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앞의 책, p.36.). 이러한 인식은 독일이데올로기에 잘 드러나 있다. “의식이란 의식되어진 존재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실제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만약 모든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간 및 그들의 관계가 마치 카메라의 어둠상자에서처럼 거꾸로 선 채 전도되어 나타난다면 이런 현상은 마치 눈의 망막에 비친 대상물들의 전도(거꾸로 서있는)가 눈의 육체적인 생명과정(life-process)에서 기인 한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인간의 역사적 생활과정 때문에 생겨난다”(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옮김, 1998: 48). 전도된 사회적 실체가 전도된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도된 의식들은 결국 현실을 은폐하여 지배계급의 지배와 이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맑스에게 이데올로기란 사회 경제적 관계 등 사회적 제 모순을 은폐하고 숨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람시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이나 관념들의 체계로 보는 견해와는

---

을 역임. 드 트라시에게 이데올로기란 하나의 학문, 더 정확하게는 사고력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심스럽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그 어떤 것도 상정하지 않으며 원인에 대한 어떤 관념도 환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이데올로기를 아무런 유효성을 지니지 않는 단순한 현상으로 환원하는 모든 부수현상주의적 개념에 반기를 들었다.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모든 변동은 구조(즉, 토대)의 즉각적인 표현으로서 제기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사적유물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초보적인 소아주의로서 반박되어야 하며 실천적으로는 맑스의 진정한 입장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람시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억압적 구조들을 영속시키는 데 공헌하는 미묘하지만 널리 침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조작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칼보그, 강문구 옮김, 1991). 그람시는 노동조합, 학교, 교회 그리고 가족 등과 같은 구조와 행위의 모든 범주를 포함한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기존질서와 이것을 지배하는 계급의 이익에 어떻게든 봉사하는 가치, 태도, 신념 그리고 도덕 등의 전체계에 ‘침투된 것’으로서 헤게모니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헤게모니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사회화의 기구에 의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된 조직원리 또는 세계관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헤게모니는 여러 방식으로 피억압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착취와 일상적 곤궁을 수용하거나 그것에 ‘동의’하게끔 유도하였다. 그람시는 정치적 강제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부르주아적 지배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파악하였다(앞의 책, p.59).

올리비에 루블은 『언어와 이데올로기』라는 저서를 통해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의 굴절과 반영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루블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말의 의미까지도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말에 대하여 힘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루블은 이데올로기는 당파적 생각, 집단적 생각, 은폐적 생각, 합리적 생각, 권력에 봉사하는 생각이라는 다섯 가지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올리비에 루블, 홍재성·권오룡 옮김, 2003: 13-39).

권력에 봉사하는 생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특성은 권력의 다양

한 형태만큼 ‘확산된 이데올로기’, ‘파벌적 이데올로기’,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확산된 이데올로기란 널리 퍼져있으면서 현재의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이데올로기이고, 파벌적 이데올로기란 현재의 권력에 대항하여 권력을 장악하고자하는 세력이 지니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또한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란 매우 다양한(확산된 것이거나 파벌적인) 이데올로기들 내부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하위체계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렇게 정의된 이데올로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사물, 행위와 관행, 제도, 상징에 의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특권적 영역,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가 그 특수한 기능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해내는 영역은 언어이다(앞의 책, p.41.). 여기서 루블은 랑그(langue)<sup>3)</sup>와 파롤(parole)<sup>4)</sup>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인 실체를 지칭하기 위해 담화(discour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담화는 많은 수의 개인들에게 공통되며 어떤 하위약호에 의해 지배되는 파롤의 한 유형이다.

이데올로기가 권력에 봉사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담화를 통해서이다. 이데올로기가 스스로 그 합리성의 공간을 한정할 때 그것은 억압이나 위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언어의 여섯 가지 기능 - 지시적 기능, 표현적 기능, 선동적 기능, 시적 기능, 친교적 기능, 메타언어적 기능 - 을 통해 권력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루블은 이러한 여섯 가지 기능들이 각기 어떻게 다른 기능들과 교차하면서 그 교차된 기능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되는 가를 분석 설명하고 있다.

3) 언어를 어떤 사회적 성원에 공통된 요소의 체계나 일련의 습관이라고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회적 측면을 지시하는데 쓰이는 용어로 개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호들의 체계.

4) 언어행위의 사회적 측면을 가리키는 랑그 langue에 대립되는 개인적 측면의 언어행위로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 2. 연구모형

시민없는 시민운동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한 고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지시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에 관한 부분이다.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지시적 기능을 통해 지시물을 만들어 내거나 그것에 거짓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전제와 거짓인과를 통해 그 지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실제적 지시물에 대해 전혀 다른 의미,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앞의 책, p.76.). 언어가 무엇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언어와 이미 존재하는 지시물 사이의 대응관계위에서 성립하는 지시적 기능에 관계하는 것이다. 권력은 지시적 기능을 남용하여 있지도 않은 대상, 있지도 않은 현실에 이름을 지어 부름으로써 그 없는 대상, 없는 현실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있지도 않은 것을 있게 함으로써 권력이 노리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제거이다. 즉 권력은 단순히 그것들이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없는 것에 이름을 지어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표현적 기능은 말하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과 같은 전언의 발화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발화행위는 발화자의 행위이고, 발화는 그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담화는 행위자의 감정, 믿음, 시공간적 위치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담화가 그 지시물과의 관계에서 은폐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발화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폐적이라는 것이다(앞의 책, p.97.).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발화자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집단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보편적일 수 없다. 한 집단은 다른 집단의 그것과 대립되는 특유한 감정과 이해관계를 갖고 그것은 다른 권력들에 맞서 어떤 권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발화행위의 표지를 지워버릴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단합, 당연화, 자격박탈, 권위적 논거’와 같은 “표현적 기능”을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기능에서 처음 세 가지 방법은 궁극적으로 권위적 논거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수렴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주된 수단이 권위에 대한 의존이라 한다면 그것의 주된 목표는 추종자들을 끌어 모으는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네 가지 방법이다. 이데올로기적 발화란 객관적 사고가 아니라 나의 사고에 앞서 존재하여 나의 사고자체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끔 구속하는 이미 굳어진 사고다. 결국 이데올로기적 담화는 그것의 지시물뿐만 아니라 그 발화자까지도 감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지시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운동비판의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의 언론보도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재단의 KINDS를 통해 ‘시민운동’이란 주제어로 시민운동관련 기사 건수를 검색하였다. 그리고 다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주제어로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 기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9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기사 건수의 변화와 함께 기사내용의 변화 - 발화주체와 의미변화 - 에 주의하여 시민없는 시민운동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식토론과 저널<sup>5)</sup>에서 언급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내용

5) 토론: 참여연대 창립5주년, 10주년 기념토론자료,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주최 토론자료.

저널: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2002년 발행, 반년간지형태, 현재 제8호 발행).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사회”(2000년 발행, 현재 18호 발행).

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담론의 내용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인지, 시민운동 비판을 위한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인지 구분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과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에 담겨진 의미를 유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과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에 대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봄으로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비판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조사 및 분석

앞서 살펴봤듯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표현은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자기비판”하면서 시민운동진영 내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로서 1990년대 중반이후 시민운동진영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아래 <표 1>과 같이 KINDS 검색결과에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관한 언론보도는 1996년 처음 등장한다.

1996년 처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기사를 게재한 한겨레신문은 ‘머리만 큰 가분수 꼴’, ‘취약한 재정 대기업 의존 심각’, ‘장기 비전없이 반짝행사 되풀이’, ‘노동·사회단체와 연대 돌파구라는 소재목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4차례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기획기사의 연재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회원들 자발적 참여 거의 없어 정체성 흔들/회비납부도 저조, 대중보다 언론의식 자성,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온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외면 속에 심한 정체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5대 총선에 시민운동권의 대표적 인사들이 대거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중견운동가

들의 공백과 운동의 순수성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졌다. 현재 시민운동권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대안 등을 네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한겨레신문, 1996년 5월13일)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은 당시 시민운동진영에서 고민하고 있던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자기성찰의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으며, 특히 제15대 총선에서 일부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상당수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출마 제의를 받았으며 경실련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서경석목사를 비롯한 상당수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선거에 실재 입후보하였다. 15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공선협을 통해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직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던 일부 시민단체관계자들이 후보자로 나서는 상황은 국민은 물론 시민단체관계자들에게도 자연스런 모

〈표 1〉 시민운동 및 시민없는 시민운동관련 연도별 언론보도 건수

조사 시기: 2006년 5월 1일

| 연도   | 보도건수 |           | 비고                              |
|------|------|-----------|---------------------------------|
|      | 시민운동 | 시민없는 시민운동 |                                 |
| 1994 | 499  | 0         |                                 |
| 1995 | 700  | 0         |                                 |
| 1996 | 780  | 4         | 시민운동관계자 제15대 총선 출마              |
| 1997 | 914  | 9         | 경실련 김현철테이프사건                    |
| 1998 | 947  | 6         | 8월 언론개혁시민연대 출범                  |
| 1999 | 1623 | 54        | 경실련 유종성사무총장 칼럼 표절사건             |
| 2000 | 3190 | 41        | 총선연대활동, 녹색연합 장원 사무총장 성추행사건      |
| 2001 | 2725 | 68        | 언론사 세무조사                        |
| 2002 | 2686 | 42        |                                 |
| 2003 | 2583 | 24        |                                 |
| 2004 | 3810 | 14        | 대통령탄핵, 총선, 이라크 추가파병,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
| 2005 | 2888 | 22        |                                 |

습은 아니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앞서 언급한 한겨레신문 연재기사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운동 관련 기사는 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99년을 거쳐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언론사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 일종의 유행처럼 시민운동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언론 보도의 증가는 1998년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비롯하여 환경단체의 동강살리기 운동 등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적 관심 증가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와 IMF관리체제 전환으로 기존 사회집단들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시민운동세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원순, 2000).

시민운동관련 언론의 보도건수 증가와 함께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보도건수도 1999년도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96년 처음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게재된 이후 경실련의 김현철테이프사건<sup>6)</sup>과 같은 시민운동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보도<sup>7)</sup>가 1999년을 기점으로 보도건

6) 경실련이 김현철씨의 비리의혹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절취하고 그것의 공개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문제로 경실련의 도덕성논란이 전체 시민운동권의 문제로 확대 인식되었던 사건이다.

7) 「시민운동 거둬달 때」 “경실련의 신뢰성이 김현철씨 테이프 사건으로 손상됨에 따라 다른 시민단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일반국민들도 시민단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늘었으며, 회비 납부와 찬조금 지원도 줄어들어 일각에선 시민운동이 위기에 처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시민운동은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하고 공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 경실련이 벌인 사업은 경제정의 외에도 환경 주책 교통 노동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업이 많으니 상근인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의 찬조금을 받기도 했다. 운영도 시민운동 본연의 방식보다는 다분히 하향식으로 되어 갔기에 경실련의 문제점은 이런 구조에서 잉태되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큰 시민단체가 모두 경실련과 같은 위계적 대형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는 문화가 부족해서 말로만 성원을

수가 비약적으로 늘게 된다. 특히 보도건수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에 있어 시민참여 없는 시민운동 비판에서 ‘시민없는 시민운동’비판을 통한 시민운동 비판의 언론보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와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지시물간에 불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와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지시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정리한 아래의 <표 2>에 따르면 이런 사실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와 지시물의 일치여부

| 년도   | 보도건수 |                |    |     | 신문사별(보도건수/불일치)                             |
|------|------|----------------|----|-----|--------------------------------------------|
|      | 지시어  | 지시어와 지시물의 일치여부 |    |     |                                            |
|      |      | 시민없는 시민운동      | 일치 | 불일치 |                                            |
| 1994 | 0    | 0              | 0  | 0   |                                            |
| 1995 | 0    | 0              | 0  | 0   |                                            |
| 1996 | 4    | 4              | 0  | 0   | 한겨레신문(4/0)                                 |
| 1997 | 9    | 9              | 0  | 0   | 동아일보(4/0), 조선일보(1/0)                       |
| 1998 | 6    | 4              | 1  | 1   | 한국경제(1/1)                                  |
| 1999 | 54   | 27             | 21 | 6   | 동아일보(8/3), 조선일보(7/4), 세계일보(1/0), 국민일보(5/4) |

(다음 쪽에 계속)

한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 또한 시민단체 자체가 보통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보다는 오히려 직업적 활동가와 사회저명인사의 활동기반이 되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의 시민운동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우리의 시민운동은 이제 새로운 발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시민의 권익에 관계되는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민생활의 여러 문제를 발굴하고 바로잡는 야무진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도 회비를 내는 회원이 돼야 하고, 시민단체는 재정상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회원과 사회에 공개해서 도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 모든 분야에 간여하는 이른바 「백화점」식 활동보다는 분야와 역할이 분화된 운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조선일보, 1997년3월31일사설)

| 년도   | 보도건수 |                   |    |     | 신문사별(보도건수/불일치)                                                  |
|------|------|-------------------|----|-----|-----------------------------------------------------------------|
|      | 지시어  | 지시어와 지시물의<br>일치여부 |    |     |                                                                 |
|      |      | 시민없는<br>시민운동      | 일치 | 불일치 |                                                                 |
| 2000 | 41   | 26                | 10 | 5   | 시민의신문(0/0), 동아일보(4/2)<br>조선일보(0/0), 세계일보(4/1)<br>하반기에 불일치 건수 집중 |
| 2001 | 68   | 49                | 9  | 10  | 시민의신문(38/0), 동아일보(3/1)<br>조선일보(2/2), 세계일보(2/2)                  |
| 2002 | 42   | 25                | 14 | 3   | 시민의신문(16/0), 동아일보(1/1)<br>조선일보(5/4), 세계일보(2/2)                  |
| 2003 | 24   | 14                | 6  | 4   | 시민의신문(10/0), 동아일보(0/0)<br>조선일보(2/1), 세계일보(1/1)                  |
| 2004 | 14   | 4                 | 8  | 2   | 시민의신문(4/0), 동아일보(3/3)<br>조선일보(1/1), 세계일보(1/1)                   |
| 2005 | 22   | 13                | 9  | 0   | 시민의신문(6/0), 동아일보(2/2),<br>조선일보(1/1), 세계일보(1/1)                  |

<표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996년 처음 사용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는 시민 참여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시물을 가리키는 즉 시민참여 없는 시민운동을 설명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1999년을 거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는 시민참여 없는 시민운동을 비롯한 제반 시민운동의 부정적 모습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동일한 언어가 다양한 부분을 지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보도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경실련 유종성 사무총장의 칼럼표절사건, 녹색연합 장원총장의 자기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NGO대회의 서울개최이다.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부당한 전제와 거짓인과를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지시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가 다시 다양한 지시물을 지시하는 언어로 변모한 것이다. 시민운동

의 도덕성 문제도,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도, 시민단체의 내부민주주의의 문제도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통해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경실련 유종성사무총장의 칼럼 표절사건을 살펴보자. 이 사건은 경실련 유종성사무총장이 모언론에 기고한 글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실무자들이 칼럼표절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과정에 시민단체의 내부민주주의의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언론은 이 사건을 엉뚱하게도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시민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이라는 사설<sup>8)</sup>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오래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8)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민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다…그런데 최근 이 단체가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시민운동을 아끼는 사람들로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더구나 내분의 원인이 이탈파들이 주장하듯, 지도부의 도덕성과 순수성에 문제가 있는데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독일의 시민운동이 독일 민주주의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독자성과 순수성을 가지고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 일부 이탈파들이 이탈이유로 『샘물처럼 맑아야 할 경실련 운동이 순수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하루 빨리 경실련이 현정권과 보이지 않는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범상하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같은 주장이 단순히 현재의 경실련 사무총장이 현정부 실세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도 짐작하지만 만약 실제로 정치권과 보이지 않는 끈을 잇고 독선과 관료주의를 팽배시킨 흔적이 조금이라도 확증된다면 경실련의 장래는 어둡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시민운동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순수성과 도덕성이 높아야 하며 그래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구성원들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출 때 시민운동은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이 정파에 영향 받아 정치화하거나 명망가 중심의 활동무대가 될 때는, 그리고 일부 직업적인 활동가들의 독무대가 될 때는, 그런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조선일보, 1999년3월6일 사설).

1997년 경실련 사태당시의 보도태도(각주 7참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가의 도덕성문제와 시민단체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 될 사안이 느닷없이 독일시민운동의 경험이 언급되면서(권위적 논거의 기능으로 작용)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으로 전제되는 과정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순수성 주장이 타당하다는 권위를 미리 확보해 둔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 실재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 경실련 관계자의 입을 통해 현정권과 시민단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면서(당연화 전략)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미래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녹색연합 장원총장이 녹색연합 후원의 밤 행사에서 언급한 '녹색연합의 생태적 고백'<sup>9)</sup>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시민단체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스스로 자인하는 고백으로 전도되었다. 생태적 고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실재 있었던 것처럼 부당하게 전제되어 버린 것이다. 아래의 언론 보도는 이데올로기 담화의 지시적 기능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녹색연합 대표 장원교수가 고백했듯이 국내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시민없는 시민단체’가 되고 있고, 관료적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많다...”(문화일보, 1999년10월16일).

녹색연합의 생태고백은 시민단체관계자의 자기고백에서 출발하는 문제로 일정부분 이유있는 비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과거

9) 녹색연합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새출발을 결의하는 취지로 환경운동에 대한 10가지 반성을 언급하였다. ▲환경운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과 ▲같이 일하는 환경 동지들에 대한 사과 ▲스스로에 대한 비판 ▲운동의 방식에 대한 반성 ▲운동의 내용에 대한 반성 ▲재정 문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한 점 ▲또 하나의 권력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부족 ▲운동의 대상인 자연에 대한 소홀함 등이다.

가 아닌 미래의 도약을 결의하는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특정단체의 일부경험에 의한 고백이라는 점에서 전체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시키기는 무리한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 문제를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시민단체관계자의 입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녹색연합 대표 장원교수가 고백했듯이 국내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시민없는 시민단체’가 되고 있다”는 보도나 “얼마 전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교수가 자기반성 형식으로 토로했듯이 국내 NGO들이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 머물거나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발화자가 시민단체관계자임을 그것도 교수신분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굳이 녹색연합 사무총장 누구하면 될 것을 모모 교수라는 것을 밝힘으로서 은근히 발화자가 교수신분으로 권위가 상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원사무총장의 자기고백이 녹색연합의 경험에 근거한 녹색연합의 자기반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NGO또는 국내 상당수 시민단체의 전체의 자기반성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1세기 NGO의 역할이란 주제로 10월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서울 NGO세계대회는 행사주체의 대표성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NGO들이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한 자리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NGO 세계대회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동아일보는 ‘서울선언에 담긴 뜻’이라는 사설을 통해

“서울 NGO세계대회의 폐막에 즈음해 ‘서울 NGO 밀레니엄 선언’이 어제 발표됐다 ... 이 가운데 각국 NGO들에 요구한 행동계획은 NGO역사가 짧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 윤리적 성실성을 강조한 대목은 얼마 전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교수가 자

기반성 형식으로 토로했듯이 국내 NGO들이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 머물거나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시민운동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자세로 새로운 좌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동아일보, 1999년 10월16일).

문화일보도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문제가 국내외의 공통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슨 근거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기사내용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국내 NGO의 과제로 지적돼 온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하면서도 공통적인 과제임이 확인됐다. 쿠미 나이두 국제시민연대 사무총장은 “NGO의 역할은 일반 시민들의 바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NGO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때로는 일부 국가의 정부와 NGO가 경쟁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역기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NGO들은 서로간의 연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NGO의 비판적 역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 및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화일보, 1999년10월13일).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사례는 이것을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곤란한 것들이었다. 왜냐면 경실련 유종성사무총장의 칼럼 표절사건의 경우 시민운동가의 도덕성의 문제와 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단체 내부의 비민주성의 문제로 이것이 시민참여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로 전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다른 언론 보도내용<sup>10)</sup>에서 확인되는 대목이다.

10) “유력한 시민단체의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도체계 문제로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에 상근하는 상당수 실무자들이 지도부에 불신감을 표출하면서 조직이 양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주목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언론은 이 문제들을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으로 이용하였다.

서울 세계NGO대회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봤듯이 서울세계NGO대회 어디에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제NGO대회에서도 시민없는 시민운동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처럼 기술함으로써 국제회의의 권위를 빌어 시민없는 시민운동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증받고자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도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 총선 연대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보도추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언론의 이러한 보도태도에 대한 문제가 논란<sup>11)</sup>이 되기도 하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로 “언론의 보도가 시민단체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단체의 활동이 왜곡되는 문제”(정수복, 2002: 130)나 “과거 일제시기 독립운동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운동을 하면 피해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시민참여의 장애요소”

---

이번 진통의 소소한 전말보다는 일각에서 제기한 지도부 사퇴론의 논거(論據)이다. 그것의 핵심은 시민운동의 관료조직화와 비민주성 문제다...

조직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가 필수적이다. 몇몇 명망가들에게만 맡길 단계는 지났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시민단체에게 돌릴 수만은 없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불런터리즘이 생동력 있는 시민운동의 기본 조건이다. 이번에 표출된 경실련의 진통과 고민이 시민운동의 일보 전진을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경향신문, 1999년2월22일 사설)

- 11) 「시민운동 현실 무시한 판지걸기」 “언론이 다시 시민운동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지난달 2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시민운동의 재정립’이란 주제로 열린 제3회 전국시민단체대회를 보도하며 거의 같은 목소리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비난했다. 특히 올초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에 비판적이었던 신문들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어 한층 눈길을 끈다. 11월25일치(조선일보) 사회면은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시민운동에 시민도 대안도 없다. 참가단체들 자기비판. 낙선-낙천운동 준법정신 무너져’라고 보도했다.…”(한겨레신문, 2000년12월4일).

(앞의 책, P.405.)라고 지적한 정수복의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라는 저서가 다음과 같이 엉뚱하게 인용되기도 하였다.

“...정수복(47) 사회운동연구소장이 출간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아르케 출판사)에는 10여년간 그가 몸담아온 시민운동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여기저기 사업만 벌이는 백화점식 운동 방식과 언론 플레이 중심의 활동,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 시민단체의 약점을 숨김없이 꼬집는다.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크리스찬아카데미 등 주요 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그이기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다...”(조선일보, 2001년1월26일).

<표 2>에서 살펴봤듯이 2002년을 지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보도건수는 외형상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보도건수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와 지시물의 불일치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일부 언론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시어와 지시물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즉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시민참여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보도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시민운동의 문제점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큰 저항없이 수용되는 상황 즉 이데올로기로서 '시민없는 시민운동'비판이 작동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다른 권위를 동원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담화는 그 자체로 전반적인 시민운동비판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즉 다른 설명이 없이도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으면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sup>12)</sup>. 발화자를 숨길 필요도, 굳이 부각시킬 필요

12) 이런 사실은 아래의 언론보도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부당한 전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도래를 예견하고 있으며 실재 2004년 보수층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민단체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없는 시민단체는 이제 그만」 “시민단체는 ‘제5권부(權府)’로 불리기도 한다.

도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이제 시민참여가 없는 시민운동 현실에 대한 자기성찰의 의미를 벗어나 시민운동 비판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스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진영의 내부비판의 언어에서 지배권력의 언어가 되면서 시민운동 비판의 상투어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 언론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제기한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선거를 통한 야당의 집권이라는 김대중 정권의 출범으로 사회전반의 많은 변화가 추동되었다. 권력화된 언론과 기존 권력을 대체한 김대중정권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갈등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표출되었으며 정부는 신문고시 부활, 언론사 세무조사와 같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언론을 견제하였으며 급기야는 중앙일보 홍석현회장이 탈세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가 1999년이다. 이 시기 시민단체는 권력화 된 언론

---

제4권부인 언론과 함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시민단체들은 양(量)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함에도 ‘한목소리, 한몸짓’을 보여온 데 대한 비판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 ... 특히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역할과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셌다. 개혁을 앞세운 현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시민단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다행히 시민단체들은 최근 들어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활동과 노선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앞세워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또 조만간 보수층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민단체가 탄생하는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변화와 성장이 기대된다.”(주간조선, 2002년3월14일).

을 개혁하자는 의도로 1998년 8월 언론운동 관련 단체들이 모여 ‘언론개혁 시민연대’(언개연)를 결성하여 신문개혁을 제도적, 구조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기사를 넘어 1999년 이후 언론의 시민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이 급증한 배경에는 이러한 시대상황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측면은 “언론과 시민단체” 또는 “언론으로 대표되는 기존 권력과 시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 세력간”의 ‘헤게모니 쟁취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 기존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라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일 것 같다.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통의 속성인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는 상호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김재범, 2000)는 것이다. 사회권력의 제4부로 일찍이 대접받고 있는 언론이 제5부로 떠오르는 시민단체에게 순순히 자신의 기득권인 권력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공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경쟁 상대로 떠오른 시민단체를 일부 제도권 수구언론은 마땅치 않게 보고 있으며 동반자로서 대우하기를 꺼리는 양상이 시민단체와 언론의 갈등양상으로 표출되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면의 사실만 반영한 것으로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언론이 경쟁자로 등장한 시민단체를 마땅치 않게 볼 수 있다는 단순한 정황만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담화를 통해 시민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 언론이 단순히 제4부의 권력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에서 구질서와 냉전 반공 헤게모니의 수호자이자 대변자로서 기능하고 있다(최창집, 2002: 192)는 지적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최창집교수에 따르면 민주화는 국가의 동심원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으며 과거 야당이었거나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집권엘리트가 교체되는

과정에 과거 국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던 집권엘리트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적 부문사이에 일정한 탈구현상이 발생했으며 민주화 이후 최상층 기득권 세력의 요구를 대변하고 이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언론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국가의 과잉과 억압에 저항한 민주화 과정이 시민사회와 NGO의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는 필연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화란 개발독재 속에서 왜소되었던 시민사회가 정상화되고 그 힘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의 왜곡된 모습들이 교정되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1).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한 축에는 지체된 민주주의를 완수하는 민주주의의 적극적 기제로서 과잉된 국가의 축소와 억제된 시민사회의 활성화라는 시민사회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헤게모니 갈등의 한 축이 언론의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적 비판이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언론과 시민단체의 헤게모니투쟁은 기존 보수권력으로 대표되는 언론의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언론이 제기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시민운동비판의 유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부당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관계자들의 주장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낙인 앞에 무기력하다는 현실<sup>13)</sup>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권력에 봉사하는 사고’로서의 이데올로기의 특성에서 살펴본다면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확

13) 2002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내 20대 청년 2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연대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37%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은 이런 사례라 하겠다.

산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파벌적 이데올로기는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확산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을 때 시민단체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 분석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시민운동비판의 수단으로 작동해가는 과정에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처음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배경이 일부 시민단체관계자들의 정치권 진출로 촉발된 문제였으며, 이후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관계자의 잘못된 행태가 보도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공선 협후원금 요청사건, 경실련 김현철테이프사건, 경실련 유종성총장칼럼 표절사건, 녹색연합생태고백, 녹색연합장원총장 성추행사건, 경실련 정치인 후원금 요청사건, 서경석목사 총선연대 비난 등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축적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의 상당한 근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조작을 위해 전제를 하더라도 없는 사실에 근거해 부당한 전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제의 조건을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일부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부당한 전제와 의미전이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시민단체의 부정적 행태는 시민운동이 채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성장해오는 과정의 시행착오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관계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도출변수에 의해 시민운동의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운동관계자들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문제가 시민운동비판의 이데올로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쟁투의 공간으로 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곤란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시민운동관계자들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담화의 발화자로 자기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 형성에 있어 공모자로 등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봤듯이 시민운동 관계자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확인해주는 발화자로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시민운동관계자 스스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의 권위적 논거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언론이 시민운동관계자의 발언의 진위를 왜곡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내부에 언론의 시민운동비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1999년 이후에도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의 발화자로서 시민운동관계자들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무의식에 따른 공모와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지점이다. 1999년 이후에도 시민운동관계자들이 발화자로 나서는 것은 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무의식적인 대응인가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발화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무지라기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기꺼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자신과 자신의 단체에 대한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자신과 자신의 단체를 위해 전체 시민운동을 ‘시민없는 시민운동’으로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측면 또한 존재한다. 또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먼저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시인한다거나 다른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의 외피를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시민운동비판의 이데올로기적 담화로 작용하는 데는 시민운동관계자들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고착되는 과정에 토론회를 비롯한 학술회의가 상당부분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실 또는 전체 맥락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언론이(한겨레신문, 2000년 12월 4일)문제를 제기하지만 언론의 이러한 형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토론회에 참가한 학자와 시민운동관계자 자신은 반성적 의미에서 또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을 하기위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론보도에서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인정하는 기사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특별하게 시민운동관계자가 시민운동 비판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의의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에는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되곤 하였다. 일상적 또는 반성적 의미의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선취해 그것을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의 이데올로기로 이용한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다양한 부분을 지시한다는 사실은 이데올로기적 담화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국 전제와 거짓인과의 과정을 거쳐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시물이 형성되었으며, 당연화와 권위적 논거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표현적 기능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담화가 완성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비판의 유력한 이데올로기적 담화로 기능하게 되었다. 내부비판의 언어가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로 변모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 담화는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끊임없이 침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부당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항변이 늘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존재가 아닌 제거라는 이데올로기적 속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없는 시민운

동'이란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를 다시 시민운동 내부 비판의 언어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시민없는 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적 비판에 맞서 새로운 파벌적 이데올로기 형성에 대해 시민운동진영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른 시민운동 비판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해서도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 참고문헌

- 김동춘. 1999. 『한국사회운동의 현주소』. 황해문화, 여름호.
- \_\_\_\_\_. 2004. 『전환기의 한국사회, 새로운 출발점에선 사회운동』. 시민과 세계, 제6호. 당대.
- 김재범. 2000. 『시민단체와 언론, 상호보완 경쟁의 관계』. 시민사회, 창간호.
- 김호기. 2000.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경제와 사회, 겨울:8~34.
- \_\_\_\_\_. 2002. 『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시민과 세계, 창간호. 당대.
- 데이비드 맥렐런(David Mclellan). 2002. 『이데올로기』. 구승회 옮김. 이후
- 박원순. 2000. 『상호바람직한 거리설정, 생산적 긴장관계 유지해야』. 시민사회, 창간호.
- \_\_\_\_\_. 2002.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당대.
- 서경석. 2003. 『한국 시민운동의 재정립을 위하여』.
-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986. 『그람시의 옥중수고 I』. 이상훈 옮김. 거듭.
- 올리비에 르볼(Olivier Reboul). 2003. 『언어와 이데올로기』. 홍재성·권오룡 옮김. 역사비평사.
- 유석춘·김용민. 2000.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정책포럼 자료집
- 정수복.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창작과비평사.
- 조효제 편. 2000. 『NGO의 시대』. 창작과비평사.
-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 \_\_\_\_\_.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 조희연 편. 2001.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 참여사회연구소. 1999. 『참여연대 창립5주년 자료집』.
- 최창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K. Marx·F. Engels). 1988. 『독일이데올로기 I』. 박재희 옮김. 청년사.
- 칼 보그(Carl Boggs). 1991. 『다시 그람시에게』. 강문구 옮김. 한울.
- 하승수. 2003. 『한국 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자립성의 도그마에

대해』. 시민과 세계, 제3호. 당대.

하승창. 2000. 『시민운동 10년이 낳은 문제 시민없는 시민운동 극복을 위한 작은 생각』.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http://www.kinds.or.kr/>

---

김희송: 광주지역의 시민활동가로 지역 환경단체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NGO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hesal@hanmail.net).